

북한 정세와 남북한 관계 전망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sccheong@sejong.org

2008년은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당-국가체제인 북한에서 정권 수립 기념일은 당 창건 기념일에 비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올해에는 5년마다 실시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도 예정되어 있어 9월경에는 국가지도기관 선거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초에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가 완료되고,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며 북한에 대한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종료하면 북한의 대외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이 자명하다. 북핵 불능화 이후에는 6자회담에서 핵폐기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어 있어 김정일 총비서는 핵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은 2월 25일 출범하는 남한의 실용주의적인 보수정부와 새롭게 관계를 정립해야 하기 때문에 2008년은 북한에게 도전과 기회의 한 해가 될 전망이다.

강성대국 건설과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

북한이 최초로 사상, 정치, 군사, 경제의 강국 건설이라는 ‘강성대국’ 건설 목표를 제시한 것은 1998년 8월 22일자 로동신문 정론을 통해서였다. 이후 북한은 사상과 정치, 군사 분야에서 이미 강국이 되었으므로 경제문제를 풀어 향후 경제강국도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강성대국의 달성 목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2007년 11월 전국지식인대회에서 최태복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김일성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자”고 주장함으로써 강성대국의 달성 목표 시점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향후 5년간 경제건설에 국가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8년부터는 김정일 당 총비서의 공식 활동 중 경제 분야 지도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표출되었던 ◆! 鳴◆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의 발생으로 약화되었던 실용주의적 경향이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서 다시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올해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55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북한당국은 정전협정 체결 50주년이었던 2003년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미 국방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를 염두에 두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강력한 전쟁 억제력으로 그 어떤 정밀타격과 핵 선제공격도 즉시에 짓밟개 버릴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남북한-미-중 간에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이 시작되면, 북한은 미국에 대한 공격적 입장을 완화하고 조속한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9월 9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60주년 기념일이다. 이에 맞춰 조선로동당 지도부는 4월경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구호’를 발표하여 정권 수립 기념일 이전까지 경제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전 인민들을 동원하려 할 것이다. 2008년 여름까지 북미 관계에서 현저한 진전이 이룩되면, 북한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정권 수립 60주년을 기념하며 체제 결속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와 권력엘리트 변동

북한은 헌법상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올해 실시하게 된다. 과거의 전례를 고려할 때 북한은 7월 또는 8월 중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9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지도기관 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국가지도기관 선거가 실시되면 그동안 남한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권력엘리트 변동의 윤곽이 확실히 드러날 것이다. 예를 들어 2003년 7월 인민보안상에 임명되고, 동년 9월 국방위원에 선출되었으나 장성택 전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분과행위’에 연루되어 2004년 7월 인민보안상직에서 해임된 최룡수는 국방위원직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추정되어왔으나 공식적으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지도기관 선거가 실시되면 최룡수의 국방위원직 보유 문제가 분명하게 정리될 것이며, 2007년 4월경 인민군 총참모장에 임명된 김격식 대장의 국방위원직 진출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투병중인 ! 것으로 알려진 조명록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다른 누가 후임자로 선출될 것인지도 관심사가 될 것이다.

2008년 내내 북한 지도부는 북핵 포기과 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협상 등으로 대외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겠지만,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총비서의 ‘영도의 계승’을 은밀하게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은 김정일과 고영희 사이에서 태어난 김정철(27)과 김정운(25)이 한동안 대외활동을 중단하였다가 2007년도에 들어와 다시 김정일의 군부대 시찰을 비롯한 각종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철은 2001년부터 2006년 4월까지, 김정운은 2002년부터 2007년 4월까지 군 간부 양성 기관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 특설반에서 ‘주체의 영군술’을 비롯해 군사학을 극비리에 공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고영희가 생전에 김정철, 김정운이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이어받아야 한다며 김 총비서에게 강력히 요청해 이뤄졌고, 이에 따라 이들을 위한 특설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 특설반을 마친 김정철과 김정운이 김정일 총비서가 참석한 공개석상에서 ‘주체의 영군술’을 구현한 군사이론을 내놓아 김 총비서로부터 박수를 받았다는 설도 있다.

북한이 2012년을 강성대국 달성 시점으로 제시한 것도 후계문제와 관련지어 고려할 수 있다. 4년 후 김정일 총비서의 나이는 만 70세가 되며, 김정철은 만 31세가 되어 젊은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된 때의 나이인 만 32세에 근접하게 된다. 따라서 김 총비서가 2012년경 김정철 또는 김정운 중 한 명을 후계자로 지명하기 위해 향후 당 내에서 그들의 권력기반을 구축하고 군대에 대한 영향력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전망

2008년 초까지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와 핵프로그램에 대한 신고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이후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며 관련국들 간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핵포기 없는 평화협정 체결은 미국이 수용할 수 없고, 평화협정 체결을 수반하지 않는 핵포기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은 북한의 핵포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2008년 말로 부시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현재의 미 행정부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 같은 사정 때문에 2007년 12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국방연구원 주최 국방포럼 강연에서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2009년까지 수순을 밟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비핵-개방-3000' 구상 입안에 참여한 한 교수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 폐기에는 환경오염 방지와 기술적 문제로 최소 1~2년이 걸린다”고 언급하였다. 결국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북한의 핵포기 및 북미 관계 정상화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 관련 로드맵을 마련하고 핵폐기에 착수만 할 수 있어도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라고 하겠다.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질적으로 현저한 대남 열세를 보이고 있는 북한 군부는 핵무기 포기에는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북핵 폐기 협상이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최근 “2008년에는 그야말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의 격동이 예상된다”며 “조선의 최종목표는 핵강국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선로동당 지도부는 핵포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북한이 핵보유를 고집하게 되면 2012년 강성대국 건설도, 김정일이 자신의 후계자에게 안정된 대외 안보환경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도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이 과거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문제 삼기보다 미래의 핵확산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및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김 총비서가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핵포기 로드맵 확정에 합의하는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실용주의적 대남 접근에 대한 대응 방향

북한 매체는 2007년 11월초까지만 해도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의 대북 정책을 강렬하게 비판하였다. 그러던 북한에게 대북 강경 입장을 가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대선 출마 선언은 당선이 유력시되던 이명박 후보와의 갈등적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후 북한은 이회창 후보의 대북 강경입장을 강렬하게 비난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명박 후보에 대한 비난을 자제함으로써 대선 이후 남북한 관계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최근까지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 사실상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10.4남북공동선언’과 ‘민족공조’에 대한 이 당선자의 입장이 구체화 되는대로 새 정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2007년 ‘2.13합의’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서서히 개선됨에 따라 경제 재건에 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남한의 지원 없는 경제재건 노력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은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한과의 협력, 남한 기업의 대북 경험 환경 개선에 동의하면서 남한과의 경험 확대에 합의하였다. 북한이 최근 ‘강성대국’ 달성의 목표 시점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의 확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덕분이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남한의 차기 ‘실용정부’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4공동선언을 존중하면서 남북한 관계를 이끌어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남북한 관계를 전면 재정립하려 할 것인지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공조’에 대한 이명박 당선자의 입장도 실용정부에 대한 북한의 태도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북한은 출범 초기부터 북한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감추지 않았던 부시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완화시키기 위해 ‘민족공조’를 강조해왔다. 최근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김정일 총비서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남측 당국이 다른 나라들과 공조하는 것을 무척대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화해하고 단합하는 조건에서 다른 나라들과도 공조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을 소개하였다. 북한은 남한정부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북한 입장을 지지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같은 상황을 기대하기 난망한 조건에서 남한이 적어도 미국편에서 대북 적대 입장을 취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한의 차기 ‘실용정부’가 한미공조를 강조하면서도 북미 관계 정상화를 지원하는 등 북한을 포용하는 입장을 ◆! 맛灌摸◆ 북한은 그에 화답해 남한정부와의 협력의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예측된다.

2008년 북한은 핵무기 포기의 결단을 내림으로써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남한의 실용정부는 남북한 당국 간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키면서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대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으로는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도 어렵고, 자칫하면 6자회담과 평화체제 협상에서 남한의 입지와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차기 실용정부는 올해 남북한-미-중의 4자 정상회담 또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냉전구조 해체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밑줄 그은 부분은 발문(跋文)